#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

김태근**

〈차 례〉

1. 머리말
2. 합리성 이론에서 본 한국 근대화과정 조망
3.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사회병리적 현상
4.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
5. 맺음말

**【국문초록】**

정부는 2007년부터 세계화로 인한 고용불안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413-B00031).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근대화, 막스 베버, 도구적 합리성, 하버마스, 사회병리적 현상, 사회적기업

## 1. 머리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사회의 양극화는 각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총체적인 사회문제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기반이 약한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양극화가 사회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반응이 아닐 것이다. 최근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서둘러 발표하는 양상은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정치권이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연대, 환경, 분배, 사회성찰 등의 사회적가치가 신자유주의의 성장과 경쟁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자본주의적 물질적 가치 혹은 공리주의적 가

치를 사회 규범적 가치로 대체하고 사회의 공동의 삶을 통해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나 정부의 의욕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화과정이 깊이 성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기업정책은 실패하고 공허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근대화과정의 출발배경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도구적 합리성의 내용을 기술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구적 합리성이 남긴 근대시민의 부재와 비판정신의 부재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서서히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경험하고 있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정착을 위한 간단한 제언을 할 것이다.

## 2. 합리성 이론에서 본 한국 근대화과정 조망

### 1) 정부정책과 도구적 합리성의 연관관계

제 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은 그의 정치권력유지를 위하여 군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 군인집단은 쿠데타 이전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6·25전쟁 이후 미국의 막대한 물질적·제도적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다른 사회조직 혹은 국가조직에 비해 비교적 효율적이고 근대적인 조직체였다. 이러한 군대조직의 상대적 우위는 일부 군인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군사 쿠데타라는 반 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7할이 전자본주의적 영세소농경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근대자본주의 경제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김보현 2006: 13과 비교).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및 반공이데올로기 정책은 군인들의 특수한, 위계서열에 따른 명령과 복종의 조직문화와 선택적 친화성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일면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했던 요인이었던 이러한 관계형성 외에 덧붙여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서구의 초기 근대 상황에서 관찰되었던 시민계급의 부재이다.

일찍이 베버는 근대 이전에 서구보다 발달한 문명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문명권에 다양한 원시자본주의적 유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근대서구사회에서만 근대적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연구하였고, 마침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서 해답을 찾았다. 베버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의 교리에 이르면서 시민계급이 등장하였고 이 계급에 의해 근대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즉 청교도인, 특히 칼뱅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에게 금욕적 직업노동은 '신의 영광을 더 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 신앙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들은 부를 그 노동의 열매로서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를 위험스럽고, 유혹적이며, 무의미하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순전히 충동적인 소유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에 '직업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사업가들을 윤리적으로 존중하였고 금욕주의적 정규직업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적 전문가주의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베버 2010 : 343).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하다는 인식론 아래에 계산 가능한 경제 행위를 위하여 합리적인 행위지향을 추구하였던

근대의 시민계급은 법이나 행정체계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근대화의 전개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법, 행정, 음악 등이 자체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갔다. 베버(Weber 1985)는 이러한 근대사회의 분화과정을 '경제와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베버는 근대서구사회가 밟고 있는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의 세속화와 함께 합리성에 가치합리적 행위와 목적합리적 행위의 복수적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발달이 목적합리적 행위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가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생활태도를 실천하는 시민계급이 근대적 직업윤리를 통해 전근대사회를 자본주의적이고 관료제적 근대사회로 이행시키는 행위 담지자였음을 높게 평가했던 것은 분명하다.

1960년대 초 한국 사회에는 베버가 근대사회의 담지자로 규정하였던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근대적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시민계급이 부재하였다. 해방 이후 일본의 식민지재산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한국의 기업가들은 식민지 시대의 비윤리적이고 반 공동체적 기업윤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본주의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조직에 머물렀다. 게다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정부의 금융지원, 환율 등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로 성장하였다(공제욱 1993). 이러한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직업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이윤을 추가하는 정신적 태도'가 결여되었던 그들은 1961년 군사쿠데타 발발 전까지 정경유착과 금융권 장악으로 국내경제의 질서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군부의 물리력을 배경으로 쿠데타 세력은 부정부패척결과 새로운 정치지향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개발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앞세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인

들도 대거 구속하였다. 특히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재벌기업가들은 투옥과 함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하지만 발 빠르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협의회를 결성한 재벌들은 신군부와의 타협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제개발정책으로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홍덕률 1997).

재벌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국유화한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재벌의 경영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재벌에게 기업의 사적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을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에 동원할 수 있었다. 산업화를 위해 재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된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이후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이 핵심정부조직을 통해 경제정책의 기획, 추진, 관리 및 통제를 부여하며 총체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경제개발이라는 목적 합리적 행위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었고 이후에 소위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별칭 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적이고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하버마스 1993: 56과 비교).[1] 한국의 경제성장의 추진은 동시에 세계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특히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여기에는 또한 근대사회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당시의 절대적 믿음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구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잠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구의 합리성에 기반 하였던 자본주의적 경제는 합리적인 관료제와 과학 기술발전과 결합하여 빠른 시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

---

1) 김철,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바람직한 시민 사회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현상과 인식』 24-1 · 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0.에 따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경제 개발과 이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 실시된 수많은 입법은 시민의 사회경제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짐으로써 국가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이후에 법실증주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찍이 인간 사회가 합리화 되면 될수록 인간은 더욱 쇠창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베버의 예언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세계전쟁과 히틀러의 전체주의 국가를 경험하면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서구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던 서구의 이성, 특히 도구적 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특히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산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면서(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2002: 25)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을 끊임없이 정복하고자 했지만 또한 동시에 산업화의 망령에 홀린 채 계몽 자체를 신화적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도구적 합리성이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함께 과학발전과 기계화를 통해 더욱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근대사회가 이성을 발견했던 계몽시대 이후 지배의 합리성이 강조되고 자본주의적 경제의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발전에 대한 신화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개인의 주체성을 위협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음을 비판하였던 것이다(노성숙 2000과 비교).

이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이 비판되고 인간의 비판적 자아성찰이 제안되었지만 당장의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파시즘과 전쟁 그리고 그 후유증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는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빠르게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인 마샬플랜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마셜플랜에 따르면 "독일의 회복이 없는 한 다른 서유럽 나라들은 침체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에 의존하는 주변국의 산업을 위해 석탄과 철강이 풍부한 독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다(양동휴 2004: 196). 그 결과 미국 정부조직의 관료적·조직적 진화에 기여하였던 마샬플랜은 정책의 대상

이었던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근대적 합리성,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이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파슨스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가 서구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통해 긴장과 일탈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윤희 2008: 22). 당시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시대상을 반영하였던 그래서 근대화의 낙관론자였던 파슨스의 이론은 그러나 1960년 이후 신랄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다. 파슨스의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외에도 파슨스의 이론이 기능주의적 근대화론으로 다양하게 재해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능주의적 근대화론자들은 서구가 발전했듯이 서구의 가치, 제도, 자본, 기술을 수용하고 축적하면 비서구국가들도 과거의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서구의 근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의 비판정신을 계승하는 마르쿠제에 의해 부활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의 서구의 발전상을 목도하였던 마르쿠제는 “현대 산업과 기술적 합리성의 발전은 개인 합리성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자본주의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선진 산업사회는 점차 경제·사회기구의 편의성을 요구했고, 증가하는 통치기구와 행정기관에 대한 복종을 필요로 했다”고 비판함으로써 동료 비판이론가들과 근대사회의 문제점을 공유하였다(켈너 2009: 15). 여기에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으로 보였던 서구사회는 6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대 공산권은 물론이고 서구유럽에 대해서도 헤게모니를 장악 하였던 미국의 1967년 미달러화의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인 세계경제의 침체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서독,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본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의 독점적인 경제적 우위를 허물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국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베트남전쟁은 전 세계의 젊은이와 비판세력들의 투쟁의 대상이었다(강내희 2011). 여기에 소련의 스탈린체제의 붕괴로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믿었던 노동중심의 그리고 공산당의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자는 새로운 좌파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의 신좌파운동(이주영 1998)과 서유럽의 68혁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결집되어 발생했던 서구의 반물질질주의적, 반권위주의적 저항운동이었다. 이후 구좌파의 노동중심적 운동에 대한 신좌파운동과 시민사회에서의 반권위주의적이고 반문화적 운동의 결과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 - 여성운동, 학생운동, 환경운동, 반전운동 등 - 이 나타나게 되었고 서구의 도구적 합리주의나 정치중심적 혹은 경제중심적 이론은 하버마스 등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초기 한국의 근대화는 위에 간략하게 언급된 서구의 근대화과정 중 도구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물질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단일 근대화론이 지배하였던 시대상황과 일치하여 추진되었다. 대공산권의 병참기지로서 한국을 후원하였던 미국은 한국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1950년대의 군사원조에서 1960년대에 경제원조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학자들과 관료들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조언하고 개입하였다. 그 과정에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이 경제개발계획과 추진과정에 과도하게 개입되었다. 결국 한국은 민족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박정희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식한 권력 중심의 정치와 정치에 종속된 행정과 효율성 중심의 자본주의경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박동서 1998).[2] 그

2)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결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은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방식, 관료기구의 팽창과 관료제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개혁, 권위주의적 행정, 행정학의 양적 팽창 등 일련의 주제들을 한국사회와 괴리시켜 놓은 채 엮어 놓”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신용식 2003: 22).

서구의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한국의 산업화는 60년대에 시작하여 빠른 시기 동안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서구에서 도구적 이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나던 1970년 전후의 그 시점에 한국정부는 오히려 도구적 이성에 더욱 의존하는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서서히 증가하는 시민들의 자유주의적 요구와 경제성장제일정책의 그늘에서 발생했던 노동자와 빈민의 저항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고 통제해야 했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적인 국가 폭력에 의존하는 방식 외에도 국민들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관료제적 행정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2) 70년대 정부의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 하였던 정책

60년대의 신좌파의 히피문화와 서구의 68세대의 자유화의 물결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로 인해 60년대 중반부터 광범위하게 보급된 라디오와 60년대 후반부터 보급된 TV 그리고 주간지 등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대중문화의 유무가 논쟁이 될 만큼 대중들의 소비적 욕구는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정부에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정교한 지배체제의 필요성을 의

---

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대한국 경제원조정책이 결합한 근대화론의 한국적 변형이다.

미하였다. 정부는 이들 매체들을 통해 남성 중심적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청소년, 하층민들을 통제하였고, 나아가 정치권력을 옹호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이들을 동원하였다(송은영 2011: 187-205). 이러한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대중통제 외에도 정부는 다양화되었던 대중들의 문화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부터 정부에 의해 실시된 '건전한 명랑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정화운동'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퇴폐풍조 추방운동으로 연결되면서 대중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강압적으로 통제되었다. 가령 "1970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 시경이 단속한 사람들은 2만 명이 넘었고 즉결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만 5천 명이 넘었는데, 그 명목으로는 '보행위반, 통행금지 위반, 음주 추행, 노상방뇨'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송은영 2011: 210). 그 후 정부는 불온서적과 금지곡 선정 등으로 대중문화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활세계에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매체를 통한 간접통제방식이나 정부공권력을 동원한 직접통제방식 외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부의 장치들은 더욱 정교해 지고 세밀해 졌다(송은영 2011: 208과 비교).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통제방식의 결과 우리들은 반 물질적이고 반 권위주의적 운동을 주도하는 비판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더욱 물질적이고 권위에 의존적으로 존재가 되는 국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새마을 운동

1961년 5 · 16군사 쿠데타 이후 "빈곤은 사회기층 성원들에게 일반화된 절박한 삶의 실태였고, 권력블록 안팎의 엘리트들에게도 그들의 이해관심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중대 사안"이었다(김보현

2006: 88). 경제성장정책으로 국민의 절대적 빈곤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농민들은 농지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개발정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1960년대 말까지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재벌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오히려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몰렸다. 게다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학업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빈곤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청년들은 대공장이나 중소공장에서 자본주의 경제노동인구로 흡수될 수 있었지만, 농촌의 노동인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정부가 도시 노동자들의 저임금정책을 위하여 농촌의 저곡가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농촌은 더욱 상대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근대화에서 제외된 소외감, 성취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감, 발전 없는 농촌생활에 좌절감과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다”(고원 2006: 186). 결국 실의에 빠져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도박과 음주로 소일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농촌의 근본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0년 4월 22일 전국시찰이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소위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농촌근대화’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농촌운동의 성공사례와 지도자를 발굴하고 전국 각 지역이 이들 모범마을과 모범지도자를 지표로 삼아 농촌개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공무원과 군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새마을운동으로 시골집의 지붕이 산업화의 상징인 슬레이트로 바뀌었고 도로개발, 마을안길 확장, 다리건설 그리

고 마을주변 하천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 곳곳에 전기를 개설하여 어두운 마을을 밝힘과 동시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로 농촌에 지역복지의 개념이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마을회관이 설립되었고 공동구판장이나 탁아소가 설치되었던 것이 대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정부는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량증가를 위하여 양수기와 탈곡기와 방제기 등의 동력농기계의 보급을 추진하였다. 또한 용지개발과 경지정리가 정부의 주도로 실시되었다(박진환 2005).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에 농민들은 비교적 높은 호응으로 반응하였다. '잘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면서 농민들 사이에는 근검과 검약의 생활양식이 존중되었던 반면 그동안 만연했던 도박과 음주는 마을공동체 전체가 추방해야 할 금기사항이 되었다. 여기에 국가적 차원의 새마을교육은 의식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마을운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잘살기 위한 운동'의 막연한 운동방향은 정부에 의해 보충되고 확산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전 국민대상의 정치적 계몽운동으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중점사업에 일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농민들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동에 강제로 동원된 것이다. 차츰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의 이름으로 그동안 소외된 농민들을 국가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하는 것과(고원 2006) 동시에 도시로, 학교로,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비판할 수 없는 국가의지가 되어버렸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서구의 시민계급은 그들의 종교적 구원을

금욕적인 직업노동에서 확증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에서, 혹은 계몽시대 이후에는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생활양식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서구는 베버가 우려하는 것처럼 고립된 개인들이 경쟁하면서 생산하는 수많은 진리들 속에서 길을 헤매는 의미상실의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립된 채 자신들의 진리를 찾아야 했던 근대의 주체들은 다양한 진리 속에서 정신적 혼란 끝에 국가주의에 의해 파시스트와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그 후 계몽에 의해 발견되었던 도구적 이성을 또 다른 신화로 비판하였던 비판이론가들을 거치면서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도덕사회를 위한 규범적 타당성을 찾기 위하여 고립된 개인의 도구적 합리성이 아닌 언어적 능력을 갖춘 개인들의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이라는 철학적 고찰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내세우는 정신개혁운동에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에게 경제발전에 대한 집념은 경제개발정책이 5·16 군사쿠데타의 부정을 만회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통치행위라는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평가 외에 개인적인 가치관과 경험이 중첩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5·16을 구한말까지의 선조들의 무사안일과 당파싸움을, 그리고 해방 이후의 "체념과 절망만을 강요하던 숨 막힐 듯한 구질서과 구정치 체제"를 "민족사 발전의 진로를 바로잡은 민족 재활의 구국운동으로" 정의 하면서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남의 원조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자주 자립의 민족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심윤택 1972: 30-31). 이러한 지향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근대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 또는 산업화 운동·협동화 운동·과학화 운동 또는 합리화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경제건설과 경제 개발”이라고 그는 분명히 하였다(심윤택 1972: 37).

미국의 기능주의적 근대화이론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주장을 앞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그는 대기업을 통한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으로 실현하는 중이었지만 농촌에서의 상대적인 저발전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농촌의 근대화가 “조국근대화”의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농민들은 “게으르거나 자조정신이 결핍되어 정부에 의존하려는 사람”이었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혁명을 강조하였지만 농민들의 의식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 뒤에 등장한 새마을운동에서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자립이나 자조의 노력을 보이는 농촌에 한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경제적 실천을 정부의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그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농민들의 근면과 금욕적 노동을 농촌의 개발정책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서구의 청교도인들이 신에 의한 불확실한 구원상태에서 노동을 통해 주관적으로 확증해야 했다면 근면과 금욕적 노동과 마을주민들의 협동(연대)을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의 농민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지켜보던 지식인은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정신면에 있어서의 전근대적 제 속성을 불식하고 새로운 세계관 진보 발전의 사회관,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자주적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획기적인 개혁의 지표였고, 국민에게 근대화에 대한 자각과 결의를 불어넣어준 한국적 「프로테스탄티즘」”으로까지 해석하였다(최주철 1976: 26-27). 그리고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과 국민들에게 박정희는 근대적 자본

주의정신의 잠재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준 강력한 지도자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평가의 이면에는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세속화된 국가주의 아래에 노동자나 기업가나 농민을 포함하는 전 국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평가하고 보상해주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음이 숨겨져 있다.[3)]

박정희는 새마을운동본부를 설치하여 1960년대까지 지역농촌지도자들의 자발적 농촌활동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을 새마을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던 박정희는 위계서열적 관료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관의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요구하였다(유병용 외 2001: 45). 나아가 그는 특히 국가에 순종적이었던 농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참여정도에 따라 마을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을 선언하였다. 새마을운동이 농촌에 '잘살기 위한 경쟁'과 '이기려는 욕망'을 점화시킨 것이다. 이후 농민들은 마을 단위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다른 마을들과 경쟁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인간'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국가는 마을들의 경쟁을 통해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차별적으로 서열화하여 성과가 좋은 마을에는 상을 성과가 좋지 않은 마을에는 벌을 내리는 절대심급기관이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지도하며 통제하는 절대적 존재였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과 실천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고 절대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마침내 한

3) 박정희의 한 국가에서의 위치를 박진도/한도현이 인용한 어느 농촌마을 회의장면에서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1999: 74). "오천 년 동안 길들여져 왔던 생각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시책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각하께서는 새마을운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사회에서는 반공과 경제적인 가치 이외의 다른 규범들은 차츰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교육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시대에 교육체계는 반공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하고 촉진시킬 엘리트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재편되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유신헌법과 연결되면서 강조된 국민정신교육으로 교육은 애국주의, 반공, 그리고 경제개발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독재를 정당화 하였고, 고등학생 교련수업과 대학생 군사교육으로 안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을 강조함으로써 부강한 국가건설을 위한 경제적 근대화의 이념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켰다(김영화 외 1996). 자연히 국가의 교육은 획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고 단순한 암기식 지식을 가진 관료나 경영인 혹은 기능인력을 선발하도록 조직되었다. 반면 다른 교육적 내용은 철저히 금지되고 배제되었고 국가정책을 비판하거나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러한 국가교육은 사회공동체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은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반면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공동체의 적으로 사회공동체에서 배제시켰다.

그리하여 “경제지상주의의 경제목표에 의해서 설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모든 가치를 오로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명목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김철 2000: 34). 여기에 반공정책은 국민들의 강제적 통합을 위한 울타리였다. 반공정책이 감정적 증오로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민들에게 물질적 부를 가져다주었던 경제개발정책은 국가의 물리적이고 또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통제장치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동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조희연 2010). 그리하여 사회는 국민정신혁명을 내세웠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

할수록 부와 권력의 공리주의적 가치만이 숭배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결국 박정희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승인되는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일면적인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 (2) 총체적 감시장치로서의 주민등록제도

1968년에 시작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호구조사자료의 성격을 지닌 1909년의 민적법과 거주민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1922년의 조선호적령을 개선하여 1931년 인종별로 계층화한 '국민수장제도'와 1942년 효율적인 주민통제를 위한 조선기류령을 시행하였다(이승훈 2003, 홍성태 2006).

해방 후 일제시대의 조선기류령은 미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등록표로 바뀌었고 반공체제의 구축과 함께 '간첩색출'을 목적으로 시·도민증으로 법제화되기도 하였지만(김영미 2007) 1950년대 중반 휴전 후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전시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신분증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었다(김영미 2007: 311).

그러나 5·16군사쿠데타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새로운 권력집단은 1962년에 1942년의 조선기류령을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발효하였고 1968년에는 '1·21사태'와 1월 23일의 푸에블루호 사건을 계기로 일제시대의 국민수장제도를 되살려 국민들을 더욱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을 1968년 5월 29일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0년 1월 1일 주민등록법 제 2차 개정 때부터 국민 개개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나타

내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개인의 고유식별 번호로서의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제가 구축되게 되었다.

신분증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국방, 치안, 선거,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행정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포하는 고유식별번호를 영구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부여하고 그것을 공사의 영역에 걸쳐 광범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권건보 2004: 42). 주민등록제도는 모두 140개에 이르는 정보항목을 담고 있어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개개인의 모든 자료가 총집결되어 있었다(김기중 2002: 72). 그리하여 국가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국가안보나 치안의 목적 외에 국민들의 생활세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이승훈 2003).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간첩으로 의심되면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증을 늘 지니고 다녀야 했다. 또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통치한다는 의식들이 국민들에 각인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 그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은 더욱 엄격해지는 주민등록법의 규정들을 지키면서 서서히 규율화되었고 국가의 활동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되었다.

### 3) 서구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 경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의 경우 60년대 중반부터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믿어진 합리성은 세계를 바꾸려는 도구적 행위로 규정되며 더욱 비판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제적 이익과 더욱 합리적인 조직과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그리고 근대 관료제는 더욱 합리적인 지배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일상생활에 갈수록 정교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마침내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의 치안, 국방,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감시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략적으로 근대국가의 관료제적 행정과 정치권력에 대해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새롭게 정립하려는 세 가지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근대의 이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경향은 근대개념 자체에 의문의 시선을 던진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도구적 합리성으로 변색되었던 계몽을 또 하나의 신화로 규정하고 인간의 비판적 정신을 새롭게 복원시키려고 했던 그 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계몽의 이성 그 자체가 권력화되고 수단화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벤덤이 근대사회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설명했던 판옵티콘이 푸코에 의해 인간을 감시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근대권력의 상징으로 비판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조형근 1997: 31).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의 특성상 동일한 지향성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근대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권력에 의해 훈육되고 그 결과 권력에 복종하고 지배를 내면화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폭로하고 권력 자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된 이성을 거부하였다.

두 번째 경향으로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비판이론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마르쿠제는 지배의 합리성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결합되어 인간을 종속시키고 자유 시간을 탈취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체주의화」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마르쿠제 2009: 49). 결과적으로 그가 보기엔 후기 산업사회에 이성과 자유를 상실한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통제되고, 이중적이며, 타율적이고, 지배에 저항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일차원적 인간이 되어 버렸다(켈너 2009: 23). 복지국가의 경우처럼 인간은 산업사회의 불가피한 부산물인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얻는 대가로 복지국가의 관료제적 간섭을 용인하고 부자유를 수락해야 했다(임채광 2003: 127). 마르쿠제는 산업사회가 다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적 주체의 등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마르쿠제 2009: 306).

하지만 비판이론의 계승자인 하버마스는 마르쿠제가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 전반에 침투하여 생활세계를 종속시키고 왜곡시키는 근대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하버마스 1993: 69-70). 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히 목적합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식 강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하버마스 1993: 113). 하버마스는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의 실천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체계와 생활세계를 분리한다(하버마스 2006).

파슨스와 루만의 이론으로부터 수용한 체계는 화폐라는 탈언어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작동하는 경제체계와 권력이라는 탈언어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작동하는 정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버마스는 이 두 체계가 관료적이거나 자본주의적으로 합리적 효율만을 강조하고 사회를 도구적으로만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활세계가 이 체계들의 개입으로 식민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식민화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에 맞서는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이론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박종대 2001).

끝으로 세 번째는 루만의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정치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루만

의 체계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근대사회는 복잡성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특수한 체계들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체계들은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매체의 작동의 지평 위에서 자기준거에 따라 자기생산하면서 자신을 환경과 구별한다. 1차적 질서의 관찰만으로 자칫 폐쇄적이 될 수 있는 체계는 타자준거에 의한 제2차적 질서의 관찰을 통해 단순히 폐쇄적이기 만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체계의 자기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루만 2007). 정치체계의 경우 루만은 자신의 체계이론적 토대 위에서 정치, 행정, 공중(Publikum)으로 분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시 대중은 정치체계 내의 다른 두 개의 하위체계인 행정과 정치에 대하여 역할특수적으로 분화되어 반응한다. 루만의 이러한 이론적 발상은 베버가 근대사회 관료제나 정치의 문제로 말한 지배적 장치로서의 정치체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민은 “정치적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쇼윈도우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이끌어 내고 폭도가 아니라 유권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Luhmann 2010: 78). 루만의 이런 관점을 따른다면 대중역할의 분화된 형태로 인해 관료제와 정치는 항상 대중의 요구를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근대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을 감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을 거부하든, 권력을 비판하든 아니면 권력을 새롭게 구성하든 서구의 이론들이 전제하는 것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존재이다. 하지만 다시 한국 사회로 눈을 돌린다면 근대국가의 기본경로로서 합리적인 통치방식 특히 도구적 합리성이 한국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전제적인 권력사용이나 통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개인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나 반공정책이 위의 사례로 열거한 새

마을운동이나 주민등록제도 등과 연계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비판정신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어 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정부가 두 중심정책의 효율적 행정과 합리적 관리를 담당할 관료를 양성하기 위하여 만든 교육체계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비판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합리성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방식에 제한됨으로써 시민사회가 정치체계에 종속되는 현상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

일부 민주화운동세력이 70년대와 80년대에 국가의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국가지배를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였지만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나치게 이념화되고 점차 이들마저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목적합리적 행위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한계에 갇혀버렸다.[4]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아가 민주화 이전과 비교하여 단순하게 정치체계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체계에도 종속되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체계를 통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현실화되었다.

## 3.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사회병리적 현상

민주화 이후의 생활세계의 식민화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정치체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계급론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평가되었던 6월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론적 관점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급진적 이념투쟁에 가려져 있었던 시민들, 즉 자영업

4)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도서출판 길, 2006, p. 86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투쟁의 무기였지 깊은 사색적 천착의 결과는 아니었다”.

자들과 일반시민들 특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졌던 넥타이부대로 명명되는 전문사무직 종사자들의 참여는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정상호 2007). 그리하여 정치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곧 허망하게 무너졌다. 87년 대선과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3당 합당은 지역감정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첫째, 3당 합당은 한국사회에 규범적 가치의 붕괴와 파행적인 정치문화를 가져왔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대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자들이었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그들의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었던 가해자 정치인들과 권력을 공유하겠다며 당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지도자와 그의 참모들을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도 한순간에 정치적 견해를 바꾸었다. 국민들의 낮은 정치적 자기정체성을 확인시켰던 이 일련의 과정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규범적 가치의 토대 위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여당은 자신들의 3당 합당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였던 인사나 시민단체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은 여당에 승리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과거 독재 권력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였던 인사들을 영입하였다. 그리하여 3당 합당은 두 번째 문제로서 정당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초래하였다. 다시 말해 강령과 정책 중심으로 구성된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기반 하는 유력정치인들의 경쟁이 지배하는 정치로 고착화된 것이다. 실권을 장악한 정치인들이 정당 고유의 정치적 색채나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양 정당들 사이의 정책적 차이는 온건한 자유주의적 정당의 특성에서 최소화되었다. 결국 사회에서 규범적 가치가 사라진 뒤에 정당들은 일부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권력중심의 지역주의를 동원한 정치게임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정치체계는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5)]

정치체계의 발전이 지체 또는 퇴행하면서 재벌은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이미 재벌은 1980년대 신군부의 시장자유화로의 경제정책전환으로 경제체계에서 이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였다. 민주화는 그들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1992년 현대그룹의 정주영의 대통령선거에의 도전은 그동안 종속되어 있었던 경제세력의 정치권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제재로 정치권력의 건재를 과시하기도 하였지만 서서히 권력이 정치체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신경영 선언은 한국 사회에 경제의 효율성, 경쟁력 그리고 초일류주의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1993).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장의 특강이 어느 공중파 방송국에 의해 전국적으로 방영된 후 한국사회에는 일류를 위한 경쟁과

---

5) 루만에 따르면 지역중심 정당이 되면 “정치투쟁이 - 관통하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 갈등전선들을 통하여 이 갈등들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 대신에 -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첨예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Luhmann 2010: 401).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현상을 단순화되는 대중은 정치와 행정에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능적으로 특수한 정치체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동경이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하였다. 이듬해 1994년 정부의 세계화 선언은 이러한 시장자유주의적 이념을 한국사회에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는 지구화시대의 생존경쟁논리가 사회의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국민은 세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내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세계화와 경쟁의 논리 속에 영어공용화와 조기교육 등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유아교육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논리에 뛰어 들어야 했고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권위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했던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의 공간 속에서 직접적인 국가 폭력은 최소화 되었지만 합리성을 이유로 끊임없이 사회를 통제하는 정부와 경제적인 논리로 경쟁으로 내모는 재벌 양측에 의해 종속되었다. 다만 경제성장 논리의 주체가 국가에서 재벌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재벌은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해야 하고 그것이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맞추어 정부는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의 문어발식 무모한 경영을 방조하고 또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IMF 구제금융은 하나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재벌이 잠시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IMF의 짧은 기간을 거친 뒤 재벌은 제지받지 않는 더욱 강력한 권력조직이 되었다.

한 변호사의 폭로로 밝혀진 삼성의 불법도청문제는 이제 재벌이 제지되지 않는 권력조직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홍성태 2007). 그들의 불법과 부정이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 사법부, 검찰, 학계 그리고 언론계는 든든한 후원자로 그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랑스러운 국내의 세계적 기업에 대해 관대한 시선을 보낸다.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자유주의의 논리에 국민이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학은 시장에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외형을 성장시켜야 하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주요 업무(학문연구)보다 부차적 업무(조직혁신)가 강조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문성훈 2009). 학문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 상실에 의해 학문적 기능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의 불신에 의해 정치적 능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학문 기능과 정치 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마저도 별 저항 없이 관철되는 상황이 되었다(하버마스 2006: 530와 비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까지 숭배되면서 민주화 이전까지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도 나왔던 비판적 목소리가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논리 속에 포섭되었다. 이제 사회에는 윤리가 사라지고 오직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의 경우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지함은 사라지고 5년 내내 경제실패는 하나의 진실이 되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여론이 조성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또 다른 5년 동안 한국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인 '4대강 사업'이나 정부의 범죄 행위인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침묵하였고, 그리하여 사회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만들 수 있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이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 4.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

2007년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인 사회양극화 해소와 실업률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정책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서구에서의 사회적기업은 1990년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운동과 연계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듬해 의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Defourny/Nyssens 2010).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 새로운 기업형태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정책이 낙후된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듯 사회적기업으로 복지정책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그리고 자선단체들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이나 비정부기구로서의 제3섹터가 국가행정이나 시장의 효율성의 논리에 배제된 사회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운영이 발전되고 확대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물론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매개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반 위에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정부는 복지, 환경, 고용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우 시민사회의 뿌리가 약하고 현재는 오

히려 그마저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회적기업은 또다시 도구적 합리성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실 과거에 비해 더욱 한계가 분명해진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시민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측면들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률감소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던 과거와는 달리 복잡화된 현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높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매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을 뿐이다. 날로 심해지는 경쟁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위의 일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이 경시되고 오직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해야 하는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그들이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에서 소규모 단위의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다.

## 5. 맺음말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구적 합리성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나아가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정착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최초에 제기했던 의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복지정책이 이제 국가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으로 끝맺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지원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원책을 만들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시민사회나 일선 사회적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점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민사회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한편,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기관 즉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실업률 해소차원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제한된 관점이 아니라 복지, 환경 등의 포괄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목표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시민사회는 보다 이념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 시민단체마저 이념적으로 대립한다면 사회는 더욱 분열될 것이다. 우파든 좌파든 시민단체들이 사회의 문제들, 복지, 고용, 환경 등을 만나고 서로 토론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의 금전화에 대해 저항하고 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근간인 제3섹터나 사회적 경제로의 발전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

어야 한다. 대학은 정부의 정책과 시민사회의 실천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연계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의 재정이 축소되고 시장의 힘이 강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복지, 환경, 보건, 고용 등의 사회문제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내희, 「근대 세계체계에 대한 68혁명의 도전과 그 현재적 의미」, 『문화과학』 67, 문화과학사, 2011, pp. 57-89.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69,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pp. 178-201.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2.

권건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1-2,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4, pp. 23-43.

김광기, 「탈코트 파슨스와 근대성: 그의 명시적 근대성개념의 해부」, 『한국사회학』 41-1, 한국사회학회, 2007, pp. 256-287.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임지현 등,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2, pp. 64-84.

김동춘,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도서출판 길, 2006.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2007, pp. 287-323.

김영화,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1) - 연구 모형의 설정과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의 전개 과정 분석(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1996.
김철,「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바람직한 시민 사회 윤리의 정립을 위하여」,『현상과 인식』24-1·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0, pp. 18-40.
노성숙,「계몽과 신화의 변증법」,『철학연구』50, 철학연구회, 2000, pp. 217-241.
루만, 니클라스, 박여성 역,『사회체계이론』, 파주, 2007.
마르쿠제, 하버트, 박병진 역,『일차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2009.
문성훈,「시장에 의한 대학 식민화와 대안적 합리성」,『철학』100, 한국철학회, 2009, pp. 95-121.
박동서,「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궤도수정」,『한국행정학보』32-1, 한국행정학회, 1998, pp. 1-10.
박종대,「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관한 연구」,『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이학사, 2001, pp. 169-205.
박진도/한도현,「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 박정희 정권의 농촌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47, 역사문제연구소, 1999, pp. 37-80.
박진환,『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경제 근대화와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2005.
박태균,『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베버, 막스,『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보론/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삼성 신경영: 나부터 변해야 한다』, 삼성 신경영 실천위원회, 1993.
송은영,「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장문화의 정치적 의미」,『상허학보』32, 상허학회, 2011, pp. 187-226.
신용식,「발전행정의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2003.
심윤택,『자립에의 의지. 박정희대통령어록』한림출판사, 1972.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 철학적 단상』, 문학과 지성사, 2002.
양동휴, 「마셜플랜의 경제적 성과와 의의: 서독의 재건과 유럽통합의 추진」『경제사학』 37, 경제사학회, pp. 195-252.
유병용·최봉대·오유석,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백산서당, 2001.
이승훈, 「간첩이 아니란 걸 증명해 봐」, 『ohmynews』, 2003.7.20.
이윤희, 「파슨스 이론의 사회 평형 개념에 대한 재조명」, 『담론201』 10-4, 한국사회역사학회, 2008, pp. 5-37.
이주영, 「1960년대 미국의 신좌파와 평등의 문제」, 『인문과학논총』 30,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pp. 143-156.
임채광, 「마르쿠제의 기술 개념에 대한 비판적 모색」, 『동서철학연구』 30, 동서철학학회, 2003, pp. 123-138.
정상호, 「시민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아세아연구』 50-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pp. 163 - 190.
조형근, 「역사구부리기: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사화과학연구소, 중원문화, 1997, pp. 15-40.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2010.
최주철, 『새마을운동의 이론과 철학』, 대한공론사, 1976.
켈너, 더글라스, H. 마르쿠제, 박병진 역, 「제2판 서문」, 『일차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2009, pp. 7-24.
하버마스, 위르겐, 하석용 · 이유선 역,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이성과 현실사, 1993.
하버마스, 위르겐,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나남, 2006.
홍덕률, 「재벌 헤게모니의 대변자, 전경련」, 『동향과 전망』 35,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7, pp. 10-33.
홍성태, 「주민등록제도와 총체적 감시사회 - 박정희 독재의 구조적 유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6,

pp. 262-283.
홍성태,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이데올로기: 삼성공화국의 위험한 지식정치」, 『시민과 세계』 10,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7, pp. 256-275.

Defourny, Jacques · Nyssens Marthe,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Journal of Social Entreneurship*, 2010, pp. 32-53.
Luhmann, Niklas, *Politische Soziologie*, Suhrkamp, 2010.
Weber, Max,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C.B. Mohr, 1985.

#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in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s

- Based on Rationality of Weber and Habermas -

Kim, Tae-Keon

Since 2007,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s that can help resolve the problem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create more job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ut this paper argue die reflectivenes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for the settlement of social enterprise. The Korean Society had developed rapidly the economic growth. But in this process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was enforced by the policies of government. Whereas it in the Western societies was fiercely discussed and criticized, it was in Korean society barely. Nowaday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not only of government, but also of market the Korean society is colonized by both and has many problems as a socio-pathological Phenomenon. In this article the autor try to make a proposal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und the University must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olonization of society und promotion the social enterprise.

Key words: modernization, Weber, Habermas, instrumental rationality, socio-pathological Phenomenon, social enterprise

김태근
소속: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화번호: 010-7232-0319
전자우편: trootkim@hanmail.net

| | | | |
|---|---|---|---|
| 이 논문은 | 2013년 | 2월 | 25일 투고하여 |
| | 2013년 | 4월 |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
| | 2013년 | 4월 | 30일 게재 확정함. |